

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장의 부담과 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3.21.(목) 조선일보, ‘중대재해법, 부처 간 해석도 갈려’

2. 설명내용

- 선박·어선 등 관련 중대 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, 선원법 등 소관 안전관계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·해양수산부·해양경찰청 등에서 사고 원인, 고용 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·수사하나,
 - 중대법 관련하여서는 기업 경영 전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적법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이 “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며 실질적·최종적 권한과 책임 있는 자”를 중대법 상 경영책임자로 특정하고,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하게 됨
- 한편,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장의 부담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업종별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 중임
 - 우선, 20개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*를 기배포 하였으며, 업종별 협·단체, 관계부처와 함께 기존 가이드라인을 현장 중심의 핵심 내용 위주로 간소화하고 필요시 업종도 추가할 계획임
 - * ▲숙박 및 음식점업, ▲사업시설 유지 관리 서비스업, ▲별목업, ▲인쇄업 등 20개 업종 대상 업종별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(‘22년) 제작
 - 또한,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스스로 안전수준을 진단하는 ‘산업안전 대진단’을 추진 중이며, 컨설팅·교육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등을 연계하여 무료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음
- 앞으로도 정부는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충분히 이해하고, 각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역량을 향상시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

담당 부서	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	책임자	과 장	김태연 (044-202-7554)
		담당자	서기관	용윤서 (044-202-8951)
협조 부서	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	책임자	과 장	박지혜 (044-202-8920)
		담당자	사무관	김진영 (044-202-8923)

